
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[앵커] 지역 간담회 자료

2026. 9. 17.[목]

[안건①] 2027년 정부안 편성현황 및 배분계획(안)

I. 2027년 정부안 편성현황

○ (총 규모) '26년 2.14조원 → '27년(안) 2.09조원

- (편성 구조) ①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- 1.2조원

②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- 0.89조원(별도사업)

< '27년 예산 구조(정부안 기준) >

구분	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	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
규모	1조2,000억	8,966억
비목	지자체경상보조금	출연금
회계	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	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

○ (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)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무 하에 집행·관리하는 지역별 앵커 사업비 예산 (지자체경상보조)

- 현재와 동일 체계로 집행·관리(교육부→지방정부→지역앵커센터→대학 등) 및 지방정부 의무매칭 20% 유지

○ (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) 단일 지방정부의 집행·관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초광역 단위 지원예산 또는 범부처 협업예산 (출연금)

- 내역사업별 집행·관리체계 및 지방정부 매칭 여부 상이

※ 출연금 사업에 대한 매칭예산 편성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예정

< 초광역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내역 >

사업	예산 (억원)	집행·관리체계	지방정부 매칭
5극3특 인재양성	2,133	교육부→한국연구재단→지역센터→대학	20%
특성화 지방대학	5,455	교육부→한국연구재단→대학 ※ 지역센터 경유 검토 중	협약상 매칭
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	50	교육부→한국연구재단→대학	해당없음
첨단분야 공유대학 (COSS)	1,150		
대학 창업교육체제 (SCOUT)	57		
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	120		

II. 2027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예산 배분계획(안)

※ 이하 내용은 의견수렴용이며 변동 가능

- (방향성) 예산 배분 기준을 ‘사업 운영’ 관점이 아닌 ‘장기적 고등 교육체계 구축’ 관점으로 개편하여 앵커 체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
- (현행 배분기준) 지방정부·대학의 전년도 사업비 수주액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국고 배분→ 안정적 사업 운영 뒷받침
 - (한계) ¹⁾ 지역별 기존(전년도) 사업비 규모 격차가 심화되는 관성
²⁾ 지역 사회·경제적 여건 고려가 미비해 지속 가능성 부족
- (개선안) 중·장기적인 예산 배분 원칙을 정립하여 예측 가능성 제고
 - (기본배분 축소) 지방정부·대학의 전년도 사업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‘기본배분’ 비중 점진 축소→ 앵커 2주기 도입 시점('30.3.)에 일몰
 - (지역균형 포물러 신설) GRDP, 청년 이동률, 지방소멸지수, 대학 수 등에 따라 배분하는 ‘지역균형 포물러’ 신설 및 비중 점진 확대
 - (매칭률 인센티브 폐지) ‘매칭률 인센티브’는 인센티브 수주에 따른 추가 매칭의무 발생 부담 등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미운영

< '27년 지방정부 사업비 배분 기준(안) >

구분	내용	'25년	'26년
기본배분	전년도 지방정부 사업비의 일부 보전 ※ 보전비율: '26년 65% → '27년 40%	7,710억 (59%)	5,199억 (44%)
통합사업	전년도 지역소재 대학의 수주금액 일부 보전 ※ 보전비율: '26년 80% → '27년 同	358억 (2%)	251억 (2%)
지역균형 포물러	지역 ①경제 여건(GRDP·재정자립도), ②사회 여건 (청년유출률·지역소멸지수), ③대학 수 기반 배분	-	2,500억 (21%)
성과평가	전년도 지방정부 추진성과 평가해 차등배분	4,000억 (31%)	4,000억 (33%)
매칭률 인센티브	'26년 지방비 매칭 의지 평가해 차등배분	1,000억 (8%)	-
(관리운영비 제외) 계		1조3,068억 (100%)	1조1,950억 (100%)

- (향후 검토사항) 지방정부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원칙을 훈령·지침 등 형태로 제도화 검토

[안건④] 지역별 앵커 재구조화 방향(안)

1 추진배경

- 「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(앵커) 추진방안」('26.4.)에 따라, 지방정부별 지역 맞춤형 교육·연구 추진방향 재구조화 예정
- 국민주권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* 등을 발표하며 지역에 새로운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데에 정책 자원 집중
 - * (서남권·중부권)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, (동남권·대경권) 소재·부품·장비 혁신거점, AI데이터센터 구축 (서남권·대경권) 로봇 파운드리, 로봇테스트필드 구축
- 정책환경을 고려한 지방정부별 재구조화 방향을 선제적 제시하여, 기업이전·투자를 뒷받침할 인적 인프라의 효율·효과적 확보 촉진
 - ※ (제30회 국무회의, 대통령 훈시사항) “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를 위해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”

2 재구조화 내용

- ① 소규모·분절적 지원 탈피, ‘역량 있는 대학’과 ‘중점 과제’에 집중
 - '26년 이후 신규과제 공고 시 성과미흡 대학, 기관평가 미인증 및 경영위기대학 등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제한
 - 최대 다수의 대학을 참여시키기 위한 예산 소규모 분절 및 배분 지양
- ② 대학별 광범위한 과제 수행 지양, 대학 특성에 따른 역할 분담 강화
 - 광범위한 영역·과제에 대한 단일 대학의 백화점식 참여를 자제하고, 대학별 핀포인트 분야에 역량 집중
 - 일반·전문대, 국립·사립대, 교대 등 대학 특성·강점에 따라 역할 분담

③ 학생·인재의 수요를 고려한 체감도 높은 과제 확대

- 정책 수요자인 지역 학생·인재에게 실질적인 교육·연구 등 기회 제공
- 지역 여건에 따라 「앵커 추진방안」에 포함된 정책 메뉴판 활용
- * 연차점검 결과 최종 안내 시 정책 메뉴판 업데이트 예정

④ “메가 프로젝트” 및 “5극3특 성장엔진” 분야와의 연계성 강화

- '27년 지방정부 보조금(국비)의 15% 내외를 목표로 재구조화 추진
- ※ 기존 추진하는 과제의 산업 분야 등이 이미 연관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예산으로 분류
- 메가 프로젝트 분야 학생 장학금, 창업지원, 취업연계, 현장실습, 기업 공동프로젝트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 우선 반영

⑤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향에 관한 정책 인식 제고

- 지방정부별 ▲추진과제 내용, ▲사업비 지원 대상, ▲대상별 지원액, ▲자체평가 결과 등의 대외 공개·확산 강화를 통해 정책 인식 제고

3 재구조화 추진 방법

□ 추진 시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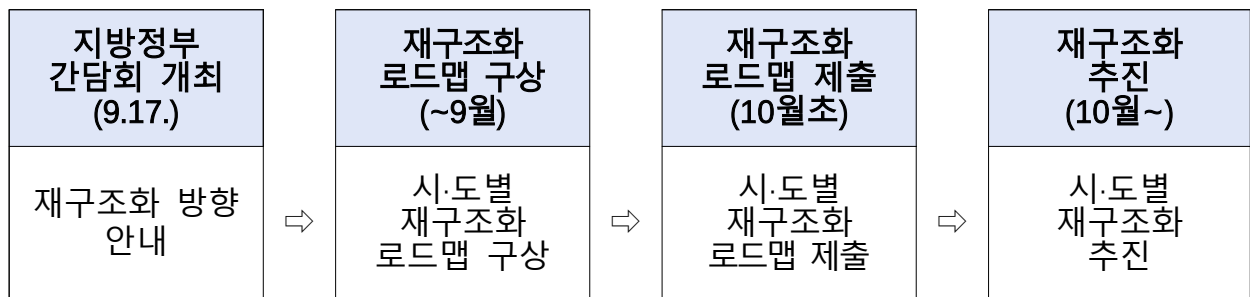
- 지방정부별 추진 여건에 따라 ▲'26년 연차점검 인센티브 배분 이후, ▲'27년 사업 개시 등 적정 시점에 맞춰 재구조화 실시
- 지방정부별 재구조화 로드맵·계획을 자체 마련하여 교육부와 공유

□ 추진 방식

- (과제 통·폐합) 시·도 기본계획 또는 대학 사업계획서 상의 과제 중 성과 가능성 등에 비추어 추진 필요성이 비교적 낮은 과제 선별
- 해당 과제 폐지 또는 유사 과제와 통합 운영하여, 자원투자 규모화

- (과제 수정·보완) 시·도 기본계획 또는 대학 사업계획서 상의 과제 중
 ▲ 산업분야 확장, ▲ 지원방식·내용 변경·개선 등 가능한 과제 선별
 - 기존 과제 사업비 규모 등을 유지하면서 세부 추진내용 보완 실시
- (과제 신설) 국토공간 대전환,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변화된 지방
 정부 여건을 고려하여 신규 과제 추진
- (공개 강화) 지방정부별 고등교육 투자 방향에 대한 홍보 강화 및
 “앵커 성과관리 플랫폼(www.anchor.or.kr)”을 통해 세부내역 일괄 공개

4 향후 추진계획



- 재구조화 로드맵 구상: ~9월
- 재구조화 방향 최종 안내: ~10월 초
- 재구조화 로드맵 제출: 10월~ (※ 로드맵 양식 별도 안내)

< 재구조화 로드맵 포함 내용(안) >

- ① 재구조화 추진 시기 및 절차 (관계대학 의견수렴, 위원회 심의 등)
- ② 주제별 재구조화 추진 내용·방식 (주제 例: ▲선택과 집중, ▲대학 역할 분담 강화, ▲지역수요 반영 강화, ▲메가 프로젝트 등 투자 확대)
- ③ 주제별 재구조화 예산 규모
- ④ 재구조화 방향에 대한 지역별 홍보 방안